광주비엔날레, 지역전 갑론을박… "기획방해" "특색전시"

내년 비엔날레에 '지역작가특별전' 개최 고심
"전시 독립성 방해"… 국제행사 예산·지원 집중
"지역 알리는 무대" 찬성… "담론장 마련" 지적

내년 9월 열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 광주지역작가특별전(가칭) 개최 여부를 두고 예술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본전시 외 광주작가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총감독 체계에서 여러 나라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를 선보여왔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내년 비엔날레에 감독이 총괄하는 본전시와는 별개로 광주만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특별전 개최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 특별전 개최 여부와 시기·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는 건물 본전시장에 지역전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아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지역 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축제에 지역이 발 디딜 공간이 없다면 허상"이라며 "만약 비엔날레 기간 특별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본전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외부 협찬을 받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별전 개최 여부를 두고 예술계에서는 우려와 긍정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지역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 기획의 독립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 행사인 본전시에 예산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시 기획자는 "선임된 총감독이 전시 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특별전을 진행한다면 전시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다. 기획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예술계 종사자는 "내년 비엔날레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본전시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특별전을 위한 협찬이나 지원을 따로 받는 것은 행정력 분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적인 무대에 지역 작가를 널리 알리고 지역색을 담은 특색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역 작가는 "천편일률적인 비엔날레에서 광주, 5·18과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담으면 특색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지역 예술가는 "지역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 자신을 알리고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를 맺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해 지역전을 추진한다면 자칫 전시가 사유·권력화 될 수 있다며 먼저 담론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광주 지역 작가는 지역특별전 추진을 두고 "일부 예술인들의 요구나 간부의 의견만으로 지역전을 추진하는 것 보다 여러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혹시나 비엔날레를 지원해야 할 간부가 전시 기획에 관여·참여한다면 축구 감독이 경기를 뛰는 모양새와도 같다"고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싱가포르의 호추니엔(49)을 선임해 전시 주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전남 장애학생 인권 피해 5년간 137건

김재철 전남도의원, 인권교육 강화 촉구

전남지역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재철 전남도의원(보성1·더불어민주당)이 전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피해가 137건 발생했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 강요·괴롭힘 10건, 금품갈취 7건, 따돌림 2건이다.

성폭행 17건은 학교 밖 신원미상 성인에 의한 피해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12건과 사이버폭력 9건 역시 학교 밖 성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도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며 "장애학생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현황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인권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원 기자

'폐수 유출 무마' 전남도청 4급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

공장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련 행정처분을 무마해준 전남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맡는 4급(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전남의 한 공장 내 폐수저장 탱크에서 7.1㎏r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 처분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에게서 건네받은 위반확인서를 숨기고, 공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돌발 사고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결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반확인서 은닉 사실을 숨기고자 '미추진 행정절차 추진계획' 등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개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30년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해당 공장 관계자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김치찜·된장찌개도 위생검사… 배달음식 불시 단속

14일까지 배달·공유주방 업체 130곳 대상 탕류 조리식품 검사

광주시가 겨울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배달음식점과 공유주방운영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계절별 다소비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 1분기 햄버거, 2분기 빙수·커피류, 3분기 삼계탕·냉면에 이어 4분기에는 찜·탕·찌개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5개 점검반 20명을 투입,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 및 포장 전문 음식점과 공유주방 운영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조리시설 청결유지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깨지거나 오염된 달걀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공유주방 운영업은 출입·시설사용 기록 보관(6개월), 위생관리 책임자와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치찜, 해물탕, 된장찌개 등 조리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도 이뤄지고,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겨울철에는 배달 음식 소비량이 늘어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아동 성폭력 온라인 유인 심각… "사전 차단·예방 교육 시급"

광주에서 온라인 유인형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어 사전 차단과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민주당·서구3) 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해바라기센터 20년 통계는 아동성폭력이 이미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인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며 "시가 디지털 기반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5~2024년) 전체 피해자 3523명 중 13세 미만 피해자가 1947명으로 55.2%를 차지해 피해자 절반이 초등생 이하고, 가해자도 저연령화에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7년간(2018~2024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미디어·온라인 유인형 범죄는 25.4%, 이 중 채팅앱을 통한 접근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성범죄 접근 경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만큼 사전 차단과 디지털 위험 감수성 교육, 가해 예방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매몰자는 어디에?'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8일 오전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국어 안전전남 앱' 개발… '재난·범죄' 외국인 신속 대응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체류 외국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언어 장벽에 따른 재난이나 범죄 대응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전남 앱은 외국인 사용자의 실제 의견을 반영한 실증형 플랫폼이다.

전남 체류 외국인의 70%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6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112·119 긴급신고 원터치 연결, 치안·교통과 생활안전 정보, 재난·안전문자 실시간 번역과 푸시 알림,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 외국인 지원기관과 날씨·환율 등의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치안, 교통, 날씨, 환율 등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재난·안전문자와 함께 다국어로 확인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가별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번역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언어별 번역 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앱의 완성도도 높였다. /오철수 기자